# 추석 전 재난지원금 '공감' … "협치 여부는 여당에 달려"

## 이낙연-김종인 회동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 사랑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여야 협치와 관련해서는 이 대표의 정책 협치 제안에 김 위원장이 집권여당의 양보를 통한 여건 조성을 우선 내세웠다.

박 의장 취임 100일을 맞아 마련된 '첫 여야 수뇌 회동'에서 이 대표는 4차 추경안 처리에 있어 제1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 위원장에게 "추석 이전에 모든 것이 집행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18일까지는 추경이 처리 되었으면 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방역과 민생 지원을 위해 긴급한 법안도 빨리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제가 김 위원장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당의 4·15 총선 공약에서 공통된 것과 정강·정책에서 공통된 것을 추출해보니 37개 정도 된다"며 "그것도 정기국회 안에 함께 노력해서 처리했으면 한다"고 정책협치를 재차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것을 언급하면서 "대통령께서도 협치를 많이 강조해주셨다"며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들을 한 번 불러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이 원하시면 두 분이 만나셔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도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당면한 과제가 4차 추경 관련해서 추석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2차 재난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경이 빨리 처리되는 게 선결과제라 생각한다"며 "그 점에 있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신속한 추경 처리에 화답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 문제와 관련해, 저는 정부가 과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느낌을 받은 사람"이라며 "어저께 갑작스럽게 통신비를 2만원씩 나눠줘야겠다는 이런 발표도 나왔는데 정부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국민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려 하지 않는다"며 "그러한 것이 앞으로 재정 운영이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 협치 문제와 관련, 김 위원장은 "어제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협치를 강조한 걸로 안다. 이 대표도 협치 생각은 변함에 없으신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협치를 강조하려면 힘을 가지신 분들이 여건을 사전에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이 끝나고 원 구성 과정 속에서 종전에 지켜오던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야 사이에 균열이 생겨났고 그것이 아직도 봉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내년이 되면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해인데 특별하게 무슨 정치적 입법이 시도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조금씩만 생각하면 협치라는 말은 안 해도 의회를 이끌어나가는데 별다른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동에 앞서 박 의장은 "양당이 최근 정책적 측면에서 많은 접근을 하고 있어서 교집합이 넓어지고 정책 협치의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며 "양당의 정책이 일치하는 교집합 분야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현실화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정기국회 내에 코로나19와 민생에 관한 비쟁점 법안들을 모두 합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과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양당 대표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을 시급히 처리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많은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지원 관련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양당은 의장 주재 원내교섭단체 정당대표 정례회의를 월 1회 개최하고 지난 총선 공약과 정강·정책 중 공통 사안을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이낙연 민주당 대표
추경 18일까지 협조해 달라
방역·민생 법안도 조속 처리
여야 공통 정강·정책 37건
정기국회서 함께 노력하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국민이 돈 맛 들이면…
정부 재정안정성 걱정 돼
관행 안 지켜져 여야 균열
아직 봉합되지 않은 상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 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합치자"

## 이용섭 시장 "따로는 공멸…대구·경북은 통합 논의 중"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전격 제안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에서 시작된 광역 시·도간 통합 논의가 확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시장은 10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비 광주의 대응 전략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주·전남은 천년을 함께 해 온 공동운명체"라며 "따로 가면 완결성도,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고 지금처럼 사안마다 각자도생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 공멸뿐"이라고 강조했다. 소모적인 경쟁을 차단할 상생 대안으로 행정통합을 화두로 꺼낸 것이다.

이 시장은 "한국 고용정보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8곳이 30년 내 소멸위험 지역으로 포함됐다"며 "이미 대구와 경북은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촌 소멸 위기, 인구 감소 등 광주·전남과 비슷한 상황에 부닥친 대구와 경북은 권영진 시장, 이철우 지사의 공감 아래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당위성과 추진 체계 등을 담은 행정 통합 기본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지난 7월 "교통, 경제, 문화 통합을 비롯해 대전과 세종이 하나로 가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세종시와 통합 논의를 제안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세종지역에서는 큰 공감을 얻지 못했다.

이 시장의 제안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양 시·도는 그동안 외견상 상생을 내세우면서도 공항 이전, 공공기관 유치 과정에서 갈등이나 경쟁 구도를 형성해 왔기 때문이다.

이날 발언은 양 시·도의 유불리를 떠나 지역의 미래, 상생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통합을 함께 모색하자는 차원의 제안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이 시장은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광주와 전남은 2007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의 통 큰 양보로 나주에 공동혁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합의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한국전력을 유치했고 유수의 공공기관 15곳이 그 뒤를 따랐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1차 이전 때의 절박함과 상생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문 대통령·민주당 지지도 동반 하락

## 20대·男·학생 '부정적'…대통령 부정평가 50% 육박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문 대통령 부정 평가는 50%에 다시 육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는 4주 만에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전국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4%포인트 내린 45.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9.5%로 1.4%포인트 오르며 50%에 육박했다. 2주째 상승했다. 모름·무응답은 1.0%포인트 오른 4.8%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차이는 3.8%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안이다.

리얼미터는 조사 기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 ▲민주당 윤영찬 의원 '카카오 메시지' 논란 ▲통신비 지원 논란 등이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연령대별로 20대(5.7%포인트↓, 33.3%), 50대(4.1%포인트↓, 44.7%)에서 내렸다. 성별로는 남성(9.0%포인트↓, 39.8%)은 떨어지며 40%대가 붕괴했지만, 여성(4.0%포인트↑, 51.5%)은 50%대로 올랐다. 직업별로는 학생(10.6%포인트↓, 29.1%)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점이 눈에 띄었다.

병역 이슈에 민감한 20대·남성·학생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컸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7.7%포인트↓, 36.0%), 대구·경북(4.1%포인트↓, 34.3%), 경기·인천(3.1%포인트↓, 48.5%)에서 떨어졌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은 4.1%포인트 하락한 33.7%, 국민의힘은 1.8%포인트 상승한 32.8%를 각각 기록했다. 두 당의 격차는 0.9%포인트였다. 2주째 각각 상승과 하락을 이어가며 4주 만에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대부분의 계층에서 하락했다. 남성(8.9%포인트↓, 29.9%), 학생(6.5%포인트↓, 20.9%)에서 역시 떨어졌다. 부산·울산·경남(8.0%포인트↓, 25.8%)에서 떨어졌으며, 주 지지층이 모여 있는 광주·전라(4.3%포인트↓, 52.5%)에서도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남성(3.7%포인트↑, 37.1%), 20대(8.9%포인트↑, 36.4%), 학생(7.1%포인트↑, 34.6%)에서 올랐다. 열린민주당 지지도는 7.1%로 전주보다 1.4%포인트 올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